

# 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sup>1)</sup>

## -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

김태련\*, 허 덕\*\*

### 1. 영국과 EU 이탈 협상 동향

#### 1.1 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요 및 상황

##### (1) EU 이탈까지의 흐름 (2019년도)

영국 의회에서 이탈 협정안에 대한 합의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2019년 3월 29일이 날짜가 맞지 않았다. 이에 4월 11일 특별 유럽이사회는 최장 2019년 10월 31일까지 비준을 위해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연장에 따라, 영국 정부는 5월 23일 유럽 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EU 이탈을 강하게 주장하는 신당인 브렉시트당이 29석을 획득하여 선두가 되었다.

2019년 6월 7일에는 테리자 메이 총리가 사임하고,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7월 24일에 총리로 취임하였다. 9월 9일 영국의 EU 이탈 연기법이 성립되어 10월 31일에 합의 없이 이탈이 될 우려는 보류되었다. 동 법은 4월의 이탈 연기 법안 표결과 마찬가지로, 이탈 연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EU와 협상 기한은 유럽 이사회 다음날인 10월 19일로 설정되었다. 새로운 이탈 기한은 2020년 1월 31일로 정해졌다. 그 후, 10월 17일 이탈 협정안에 관하여 존슨 총리는 이행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이탈 협정안의 부속서(백스톱, back stop) 대안을 EU와 합의하였다.

2019년 10월 29일 영국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하원 의원 선거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날인 30일에 상원 심의를 거쳐 총선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EU 이탈 법안 표결은 선거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하원은 11월 6일에 해산하고, 12월 12일 영국 하원 총선 투표가 실시되어, 여당인 보수당이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 당의 승리로 인해 최대 쟁점이 되어 왔던

1) 이 글은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 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이다.

\* KREI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및 편집인

영국의 EU 이탈이 2020년 1월 31일에 실현되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 13일에 개최된 EU 정상 회의에서 유럽이사회는 영국 하원 총선 결과를 근거로 영국의 EU 이탈 문제에 대한 EU 측의 기본자세를 명확히 기술한 문서<sup>2)</sup>를 채택하였다. 유럽이사회는 EU·영국 간에 합의된 이탈 협정안에 근거한 ‘질서 있는 이탈’ 실현을 목표로, 동 협정안의 신속한 비준과 효과적인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 위에, 이탈 협정안 함께 합의된 정치 선언안과 EU 지침에 따른 EU와 영국의 장래 관계를 가능한 한 긴밀한 형태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게 영국의 EU 이탈 즉시 EU와 영국의 장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교섭권한회부(위임장) 지령안을 유럽이사회(일반 문제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유럽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미셸 바르니에 수석 교섭관을 (EU·영국) 장래 관계의 교섭 책임자로 재차 지명하며, 지금까지의 브렉시트 협상과 마찬가지로 EU 회원국에 대한 정보개시 등의 투명성을 고려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3)</sup>.

해가 바뀌어, 2020년 1월 23일, 영국의 EU 탈퇴에 필요한 EU 이탈 협정법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얻어 통과되었다. 동 법에는 2019년 10월에 EU와 합의한 이탈 협정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2018년 EU 이탈법 규정을 무효화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음날 24일에 EU 이탈 협정안에 서명하면서 영국의 비준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EU 이탈 협정 법안은 1월 9일에 하원을 통과하였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심의를 시작한 상원은 1월 20일과 21일에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에 대한 영주권 보장, 영국 하급 법원의 EU법에서의 이탈 제한, 어린이 난민과 보호자의 가족 재결합, 영국 의회의 권한과 지방 분권의 정합성이라는 5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정부의 지향 방향과는 반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22일 집권 보수당 수를 능가하는 하원은 상원의 각 수정 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5가지 사항 모두 큰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관례에 따라 하원에서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여, 이 법안은 정부가 2019년 12월에 제출한 내용대로 법제화되었다<sup>4)</sup>.

2020년 1월 29일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는 EU·영국 간에 합의된 영국의 EU 이탈 협정법을 다수가 찬성하여 승인<sup>5)</sup>하였다. 전 유럽의회(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의 의장 데이비드 마리아 사솔리<sup>6)</sup>는 이번 표결 결과를 바탕으로 EU와

2) European Council, “European Council (Art. 50) meeting (13 December 2019)-Conclus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1796/13-euco-art50-conclusions-en.pdf>)

3) JETRO 비즈니스短信「欧州理事会, 英国との将来関係をめぐる交渉準備の着手を欧州委に要請」(<https://www.jetro.go.jp/biznews/2019/12/5f54d4f67cc74e9b.html>)

4) 2020년 1월 24일자 JETRO 비즈니스短信(<https://www.jetro.go.jp/biznews/2020/01/5a709665788e3d98.html>)

5) European Parliament, News, “Brexit deal approv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00128IPR71204/brexit-deal-approved-by-the-european-parliament>)

6) 제9대 유럽 의회 의장. 2019년 7월~ 2021년 7월까지 의장직을 맡았으며, 이탈리아 민주당 사회민주진보동맹 소속임. 현재의 유럽 의회 의장은 2017년 1월 17일에 취임한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타야니이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영국의 장래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어려운 상황이 상정된다고 밝히며, EU는 영국의 EU 이탈 이후 상황을 낙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탈 협정 자체는 영국의 비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1월 30일 EU 이사회(각료이사회)에서 특정 다수결 방식에 의한 최종 표결을 거쳐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영국시간 오후 11시)에 EU에서 이탈하여 다음날인 2월 1일부터 이행 기간에 들어갔다.

<표 1> 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흐름 (2019년 이후)

	날짜	영국	EU
2019 년	1월 15일	•하원이 이탈 협정안을 부결	
	3월 14일	•2019년 3월 29일의 이탈일 연장을 가결	
	3월 20일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요청	
	3월 29일	•하원이 이탈 협정안을 부결, EU 이탈 일자는 4월 12일로 연장	
	4월 10일		•최장 2019년 10월 31일까지 이탈일 연장에 합의
	5월 23일~ 26일	•유럽 의회 선거	
	6월 7일	•메이 총리가 사임을 표명	
	7월 24일	•존슨 새 총리가 취임	
	9월 9일	•2019년 10월 19일까지 이탈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의회가 합의 없는 이탈을 승인하지 않는 한 총리가 이탈 연기 요청을 EU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통과	
	10월 17일	•새로운 이탈 협정안 및 정치 선언 안에 합의	
	10월 19일	•하원에서 EU 이탈 협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체결 <sup>7)</sup> 을 보류하는 동의가 가결되어, 체결 연기	
	10월 22일	•하원에서 EU 이탈 협정 법안을 제2독회 <sup>8)</sup> 에서 가결하였지만, 10월 31일의 이탈을 목표로 하원 심의 일정안을 부결	
	10월 29일	•하원 총선거 실시에 관한 법안 가결	•EU 이탈 일자 연기 요청을 서면으로 승인하여, 이탈 일을 최장 2020년 1월말까지 연기
	12월 12일	•총선 실시 존슨 총리 주도하는 보수당이 승리	
2020 년	1월 23일	•EU 이탈 협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영국 의회에서의 이탈협정안 승인확인을 생략	
	1월 24일	•영국,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가 EU 이탈 협정안에 서명	
	1월 29일		•유럽 의회가 이탈 협정안을 승인
	1월 30일		•EU 이사회가 이탈 협정안을 승인
	1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 (영국 시간 오후 11시)	
	2월 1일	•이행 기간의 시작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료: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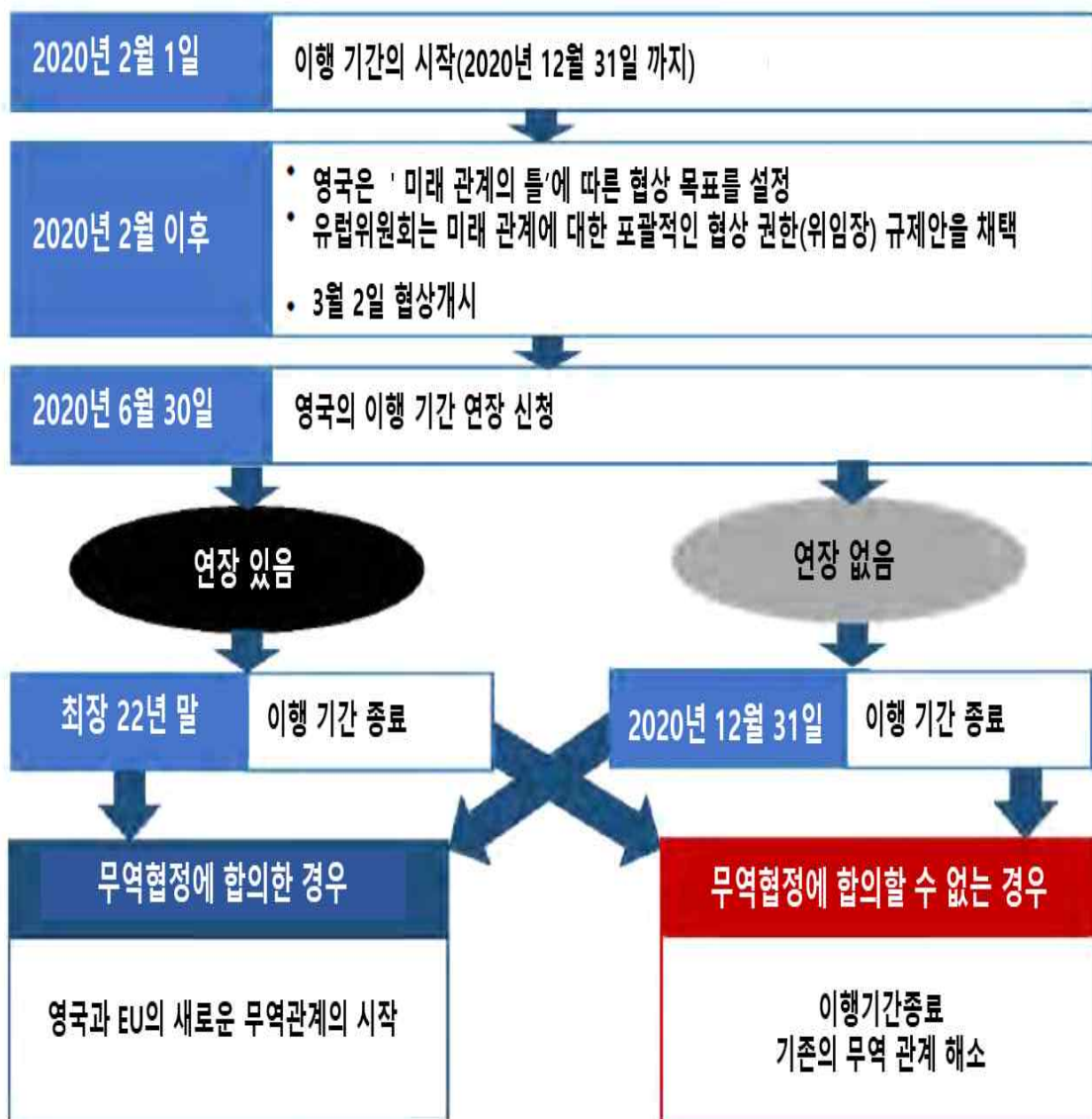
7) 의장이 의안(議案)의 채택 여부를 물어 결정함.(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8) 의회에서 중요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제도의 하나. 흔히 제1·제2·제3 독회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제1독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설명·질의·응답, 제2독회에서는 축조 심의, 제3독회에서는 의안 전체의 가부를 결정함. 독회 제도는 원래, 영국 의회에서 인쇄가 발달하지 아니한 시대에 서기관으로 하여금 의안을 세 번 읽도록 한 데서 유래함.(출처: 네이버 사전(<https://dict.naver.com/>))

(2) EU 이탈 후의 흐름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이 EU를 이탈함에 따라 이행 기간이 2020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EU·영국 간 무역협정을 포함한 장래 관계에 대한 합의를 2021년 1월 1일 발효시키기 위해, 양측의 합의를 이행 기간이 종료일까지 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행 기간은 1년 또는 2년의 연기가 가능하지만, 현재 영국은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림 1> 향후 영국과 EU와의 협상의 흐름



자료: 미즈호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報告書', 2020. 3

2020년 1월 24일 유럽이사회의 샤를 미셸 상임 의장<sup>9)</sup>과 유럽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sup>10)</sup>은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이날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질문과 답변<sup>11)</sup>’을 발표하고, 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브렉시트 이후로 예상되는 상황과 그 유의점 등을 밝혔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유럽 이사회 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또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 연합의 산하 기관인 유럽 이사회의 수반임.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최고 직책으로 여겨짐. 1975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유럽 이사회 의장은 유럽 연합 이사회의 의장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6개월 동안의 직책을 수행한 뒤에 교체되는 순번의장 제도였지만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었음. 2009년 12월 1일을 기해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공식적인 직책으로 격상되었으며, 임기는 2년 6개월임. 현재의 유럽 이사회 의장은 2019년 12월 1일에 취임한 벨기에 출신의 샤를 미셸임. 샤를 미셸은 2014년 벨기에 연방 선거 후, 그 해 벨기에 정부 형성에서 협동자가 되었음. 기독교민주당과 플람스가 크리스 페터르스를 위한 총리 지위에 마리안 티센을 위한 유럽 연합의 지위를 선택할 때 미셸이 다음 정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음. 10월 7일 전체의 동의는 새로운 정부를 형성하는 데 4개의 당들 사이에 도달하여 미셸은 페터르스를 4명의 부총리들 중의 하나로 하면서 정식으로 미셸 정부를 이끄는 데 제안하였음. 미셸은 1841년 이래 벨기에의 최연소 내각 지도자이며, 현재는 벨기에의 최연소 총리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벨기에의 총리를 역임한 2번째 프랑코폰 자유주의자이기도 함. 2019년 10월 27일에 소피 윌메스에게 벨기에 총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으며, 2월 1일에는 도날트 투스크의 뒤를 이어 제3대 유럽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음.(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0)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또는 유럽 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연합의 산하 기관인 집행위원회의 수반임. 1958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임기는 5년임.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유럽 이사회, 유럽 의회가 임명함. 유럽 연합의 직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담당 직무를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직무를 변경하거나 위원을 해임할 권한을 가짐. 또한 집행위원회의 정책과 법안을 마련함.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와 함께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는 유럽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짐. 현재의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11월 1일에 취임한 독일 출신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독일어: Ursula von der Leyen, 결혼 전 성 알브레히트, 1958년 10월 8일~)은 독일의 정치가로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소속임. 2005년부터 앙겔라 메르켈 내각 밑에서 장관을 역임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방장관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맡았음. 정계에 입문하기 전의 직업은 의사였음. 독일 최초의 여성 및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며, EU의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첫 여성임. 2019년 7월 16일 EU 의회에서 9표차로 임명동의를 얻으면서, 11월 1일에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음.(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11)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United Kingdom’s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on 31 January 2020”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10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104))

〈표 2〉 이행 기간 중 주요 유의점

이행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이탈 협정에 따르면, 7월 1일까지 쌍방 합의·결정하면 이행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년 또는 2년 연장이 가능</li> </ul>
국제 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은 이행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3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 협정 체결이 가능</li> </ul>
출시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 기간의 종료 이전에 출시된 제품이라면, EU 단일 시장·영국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유통은 제품의 변경 및 라벨 교체 필요 없이 두 시장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li> <li>•다만,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 유래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행 기간 종료 시점에서 국경의 수입 및 위생 관리에 관한 당사국의 법령을 준수</li> </ul>
물품의 이동 (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관 대응이나 부가가치세 (VAT)·물품세 내용은 영국의 EU 관세 동맹에서 이탈 이전에 이동을 시작한 제품은 EU 규정에 따라 그 이동을 완료하는 것을 인정</li> <li>•VAT 보고 의무 및 환불 등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이행기간 이전에 시작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래(월경거래)는 이행 기간 종료 후에도 EU 규정을 계속 적용</li> </ul>
지리적 표시 <sup>12)</sup> (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의 이탈에 있어 이러한 지적 재산권은 상실되지 않으며, 영국 원산의 명칭을 붙여 지리적 표시(예: 웨일스의 양고기)에도 적용</li> </ul>
EU에 거출금 <sup>1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은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 부담하고 있던 EU 예산(프로그램 종료 관련 이행 기간 종료 후 지분을 포함하여 2014-2020년의 다년도 지출계획안(MFF)), 유럽 투자은행, 유럽 중앙은행, 터키 난민을 위한 시설, EU 신탁 기금 이사회 기관 및 유럽 개발 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분담</li> </ul>
차기 M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국은 2021년부터 차기 MFF의 목적상, 제3국으로 취급되지만,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영국으로부터 EU 예산으로의 재정적 인 공헌이 필요함.</li> <li>•이는 이탈 협정의 거버넌스를 위해 설치되는 합동위원회가 결정</li> <li>•이행 기간의 연장 중 영국은 단일 시장에 계속 참여하여 이익 향유 가능</li> </ul>

자료: 유럽위원회 웹사이트<sup>14)</sup>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12)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TRIPs 제22조). 예를 들어, 통상 와인(Wine)을 지칭하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특정 지역의 이름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샴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샴페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유럽에서 수많은 와인이 대부분 원산지의 이름을 붙여, 이를 상표화하여 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는 일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U와 칠레간 지역협정(EU-Chile Association Agreement)에 지리적 표시(GI)로 첨부된 목록은 200여 페이지가 넘는 등 엄청나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 TRIPs협정은 진정한 원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표기를 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또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https://terms.naver.com/>)

13)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내는 돈.(출처: 네이버 사전(<https://dict.naver.com/>))

14)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United Kingdom’s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on 31 January 20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10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104))

## 1.2 각 업계의 반응

### (1) 농업단체

영국의 EU 이탈에 관해 농업 단체의 관심은 1) 무역 정책, 2) 규제 제도의 재검토에 있다.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와 시장 생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제도의 재검토에 관련하여, 장래에 영국과 EU의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한 농가가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초점이 된다.

영국 농가의 최대 수출 시장은 EU이다. EU와의 관계에서 무역 관계 유지와 노동력의 확보가 당면 과제이다. 또한, EU 이탈에 따라 EU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구축도 중시된다. EU 역외로는 같은 영어권인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등과의 관계 구축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EU 이탈 후 농업 정책은 2021년 이후 농업 지불 및 지불 조건(작물 기준, 면적 기준 등), 그 외에 품질 기준의 세부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업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이행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소매업계

다수의 영국 소매기업들은 영국의 EU 이탈로 비용도 소매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회가 아닌 리스크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EU 이탈에 의한 노동자 부족 문제는 소매업계에서 특히 심각하다. 미숙련 농업 종사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고액의 최저임금의 임계값을 설정하게 되면, 고용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특히 북아일랜드의 임금은 낮다).

그러나 이민 문제는 EU 이탈의 계기가 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여론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업계 단체는 호주의 고용 시스템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영국, EU의 3자간에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 유통경로와 상황에 따라 다른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15)’와 부가가치세(VAT16)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하나의 국가가 다수의 과세 시스

15)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 국가간에 무역을 할 때 해충과 질병 등이 국경을 넘어 상대국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임. 이 SPS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GATT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됨. 하지만, 이 예외 조항을 위생 및 검역조치가 아닌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 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됨.(출처: 네이버 블로그 nhgtnow, <https://blog.naver.com/malk/221371880641>)

16)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附加價値稅).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함(국세기

템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또한 이탈 후의 이행 기간(최대 48개월, 최소 1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소매업계는 이행 기간 중에 영국 정부와 유럽위원회가 조기에 고차적인 합의(higher level alignment)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3) 식품 및 음료 산업

영국의 식품 및 음료산업의 업계 단체는 2016년에 영국의 EU 이탈이 결정된 단계에서, 업계의 우선사항으로 이탈 후 무역정책 관련 노동자 확보, 제로 관세, VAT 우대 등에 대해 영국 정부에 의견을 구하였다. 또한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우선 사항은 2019년 현재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확보 문제이다. 영국의 식품 및 음료산업 노동자의 30%는 EU 역내에서 왔으며, 특정 기술을 가진 노동자(식품 과학자, 식품 기술자, 향료 배합사 등)를 모두 국내에서 고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중요한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업계는 수출입의 60~70%를 차지하는 EU와 무역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식품의 대부분은 제품 생명이 짧아(short shelf life), 수송 시간이 짧은 EU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대체 시장을 찾기 곤란하다. 때문에, EU와의 무역 관계를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영국 본토, 아일랜드 간의 유일한 상업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쇠고기와 유제품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를 자주 왕래하며 가공되기 때문에, 쇠고기 부문과 원유 부문의 안정성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

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짐.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임.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임. 부가가치세는 1919년에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1921년에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1955년에 프랑스가 제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최초임. 그 후 1967년에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였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稅目)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음.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稅制) 및 세정(稅政)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累積課稅)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系列化)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2. EU 이탈 이후 영국의 농업 정책과 무역 정책

### 2.1. EU 탈퇴 후 농업 정책

#### (1) 영국 친환경 법안 (Environment Bill)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환경 관련 각 분야의 장기 목표를 정한 「녹색 미래 :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5년 계획(25년 환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농지의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위 계획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재무부의 예산 배정도 앞으로 이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될 전망이다.

계획에서는 ① 깨끗한 공기, ② 깨끗하고 충분한 물, ③ 식물 및 야생 동물의 번창, ④ 자연재해 위험 감소, ⑤ 자연자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⑥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가치·관계 증진이라는 6가지 항목을 우선시 하고 있다. 농업에 관한 것으로는 ‘새로운 토지 관리 정책 도입’, ‘2030년까지 지속적인 토양 관리 달성’, ‘영국의 산림 면적을 2060년까지 12% 확대하도록 식림을 촉진’ 하는 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다.

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sup>17</sup>)는 2018년 12월 19일 환경 법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환경 법안(Environment Bill)」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① 대기, ② 야생생물, ③ 물, ④ 폐기물이라는 4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환경 법제의 원칙, 정부의 환경 담당 부서 설치 등을 정하였다. 이 법안은 EU 이탈 후 환경 행정의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10월 Defr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sup>18</sup>을 발표하였다. 농가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특히 물 관리에 관하여 1991년 토지배수법을 개정하여 지역 내 배수위원회(IDB), 지역의 수위 관리 및 홍수 위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가 배수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세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 환경을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의 창설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상 틀의 창설
- 공기 질 개선
- 수도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 녹지 확대
- 화학 물질에 관한 법률(REACH) 개정

17)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18)공공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을 말한다. 정책선언에는 정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에 대해 공무원이 행한 성명이나 진술 그 밖에 법률·집행명령·행정규칙 또는 규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이 포함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정책 언명 [政策言明, policy statements]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또한 이 법안은 2019년 10월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그해 12월 총선에 의해 심의가 연기되었다. 이후 EU로부터의 이탈 전날인 2020년 1월 30일에 10월 독회에서 두 개의 새로운 코미트먼트(Commitment<sup>19</sup>)를 더한 방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환경 개선 계획 및 환경 목표 설정 프로세스에 의해 검토되고, 모두 법률에 명시된다. 향후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후, 여왕의 승인 확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sup>20</sup>. 또한 이 법안의 새로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오염 플라스틱 폐기물의 개발도상국(OECD<sup>21</sup> 국가 제외)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권한 부여
- 환경 보호 법제의 발전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 관련 국제 법제의 중요한 진전을 2년에 한 번 보고한다. 환경 관련 국제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2년마다 보고서를 공표하고, 그 결과를 환경 개선 계획 및 환경 목표 설정 과정에 반영한다.

## (2) 영국 신농업법(Agriculture Bill)의 진척<sup>22</sup>

2017년 6월 영국 정부는 이탈 후 영국 신농업법(Agriculture Bill<sup>23</sup>)을 제정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 농업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제1부 제1항의 ‘재정 지원의 권한’과 제2부 제1장의 ‘현행 직접 지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것이다.

재정 지원의 권한은 우선 다음의 7개 항목 및 이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환경을 보전하고 증진하도록 토지와 물 관리

19) ‘공적인 약속 이행 정도’를 의미함.

20)2020년1월30日 英国政府ウェブサイト(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vironment-bill-sets-out-vision-for-agreener-future>

21)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ECD는 상호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및 협력기구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제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마셜플랜에 의해 1948년 발족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되었음. OECD가 OEEC와 다른 점은 OEEC가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면에서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원국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유럽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과 남미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함. OECD는 18개 기존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음. OECD는 초기에 선진국 위주로 회원을 늘렸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음. OECD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함.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효력발생(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2020년 8월 현재 OECD 회원국은 37개국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2)이 항은 和泉真理(2019), 「ブレクジットと英国農政, pp.56-58」, (JCA 研究ブックレット No.25)를 참조하였음.

23)House of Commons Library, "Agriculture Bill 2019-2020, Briefing Paper", 10 February 2020(file:///C:/Users/1730959/Downloads/CBP-8702.pdf)

- ② 농촌, 농지, 임지<sup>24</sup>)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
- ③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유지, 복구 증진할 수 있는 토지와 물 관리
- ④ 기상 변화로 인한 영향 완화
- ⑤ 환경재해를 예방하고, 감소하며, 방어할 것
- ⑥ 가축의 건강과 복지의 보전과 증진
- ⑦ 식물의 건강 보전과 증진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수준의 농업 지불을 실시한다고 하고는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을 농업 이행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지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폐지하고, 환경적 토지관리 제도(ELM/ELMS<sup>25</sup>)로 전환한다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EU 이탈 후 영국의 농업 환경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는 「그린 브렉시트(Green Brexit, 녹색 브렉시트)」라는 키워드 아래, 환경 시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1월에 전술한 25년간의 환경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18년 2월에는 농업 정책에 대한 제안문서 ‘건강과 조화’가 발표되어 퍼블릭 코멘트<sup>26</sup>)가 시작되었다. 2018년 9월, 새로운 농업 법안이 공포되고 이탈 후의 농업정책의 틀이 발표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재정 지원 권한, 현행 CAP<sup>27</sup>) 직접 지불의 단계적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의 공적 지원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은 공공재로’라는 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2019년 9월 Defra 장관 테레사 빌리어스(Theresa Villiers)는 영국의 EU 이탈에 관한 제반 절차의 지연을 우려하여, 동시 의회에서 새로운 영국 농업법의 입법 절차를 늦어도 2020년 여름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Defra는 합의 없는 이탈에 대비하여 137개의 행정 위임입법<sup>28</sup>) (Statutory Instrument)을 준비하고, 이 시점에서 126개의 행정 위임입법을 성립시키고 있었다<sup>29</sup>).

Defra는 ‘공적 자금은 공공재로’에 근거한 새로운 체제를 내세우는 한편, 영국 의회 폐회 때까지 농가 지원재정을 확보하면서, CAP 정책으로 2020년 말까지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도 확보하고 있다<sup>30</sup>).

2019년 6월 영국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Defra의 영국 신농업법안(Agriculture Bill) 등 미래농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정책에 관한 초기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Defra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24)수목(樹木)이 많이 자라고 있는 땅. 숲을 이룬 땅.(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25)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ystem

26)시민들이 시정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시장과 시의원은 의무적으로 경청하는 제도.(출처: 위키백과, [ko.wikipedia.org](http://ko.wikipedia.org))

27)(유럽 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28)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일.(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29)2019年 9月 10日字 IEG Policy 참조

30)2019年 9月 23日字 IEG Policy 참조

- 새로운 틀에 대한 농가의 반응을 보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시간 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2021년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농가가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대되는 성과 및 지불 제도에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을 한다.
- 환경 토지 관리제도(ELM/ELMS)의 실증 실험에 관하여, 개별 농가의 참여 의사 및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농가와 토지관리자를 포함한다.
- ELMS의 설계 및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채택하는 기준을 정하고, 달성되지 않을 경우 대체적인 조치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2019년 12월 12일 총선 후 2020년 1월 31일 EU의 이탈이 거의 확정함에 따라 영국국가 신농업법안은 영국 하원에 제출되었고, 2020년 1월 16일에 첫 번째 독회, 2월 3일에 두 번째 독회가 열렸다.

2020년 2월 25일, Defra는 영국 신농업법에 대한 문서 “Farming for the future : Policy and Progress Update<sup>31)</sup>” 와 ELMS에 관한 문서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 Policy Discussion Document<sup>32)</sup>” 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ELMS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하여 2020년 5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 (3) 직접 지불

영국의 직접 지불은 2027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CAP 하에서 직접 지불은 면적 기준이지만, 2028년 이후에는 새로운 환경 토지관리 제도(ELM)와 새로운 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를 지원한다. 또한 영국의 CAP 제도 하의 예산은 연간 약 35억 파운드였으나,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현재의 예산을 농가에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sup>33)</sup>.

또한 영국 정부는 2040년까지 농업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sup>34)</sup>), 2050년까지 경제에서 제로 에미션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의 교환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이탈 후 영국의 환경 지불, 직접 지불,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차기 CAP 개혁

31)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Farming for the future: Policy and progress update February 202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8041/future-farming-policyupdate1.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8041/future-farming-policyupdate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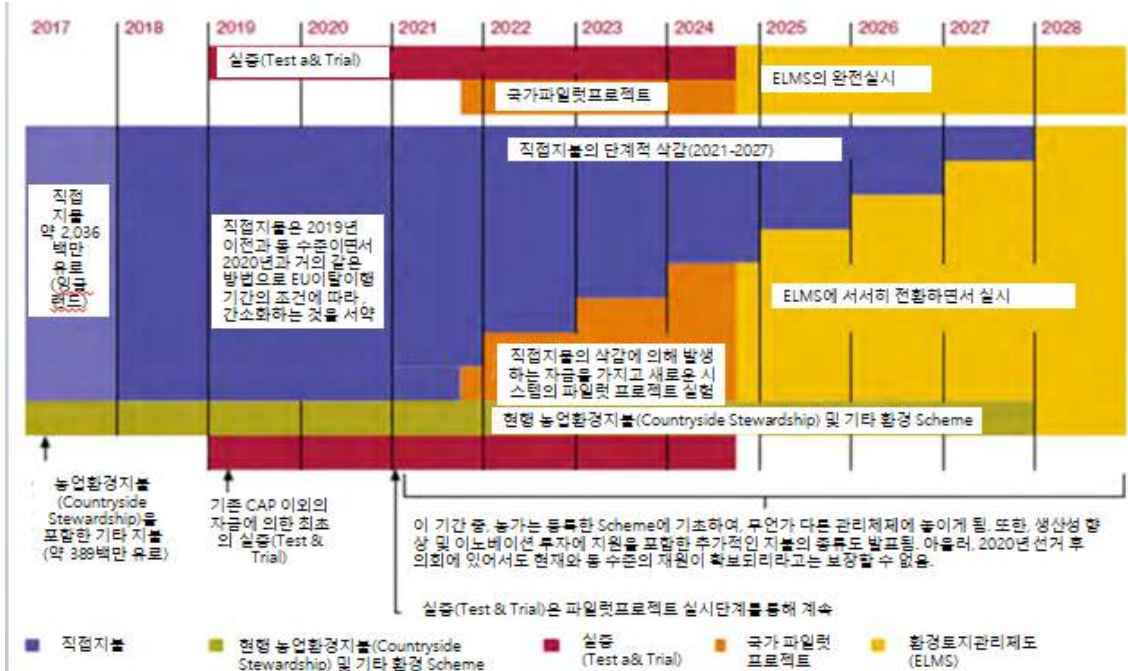
32)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Policy discussion document” ([https://consult.defra.gov.uk/elm/elmpolicyconsultation/supporting\\_documents/elmdiscussiondocument20200225a%20002.pdf](https://consult.defra.gov.uk/elm/elmpolicyconsultation/supporting_documents/elmdiscussiondocument20200225a%20002.pdf))

33)House of Commons Library, “Agriculture Bill 2019–2020, Briefing Paper”, 10 February 2020(<file:///C:/Users/1730959/Downloads/CBP-8702.pdf>)

34)무배출시스템이라고도 함. 산업활동에 있어 생산 등의 공정을 재편성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순환형 산업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이 실현되면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는 생산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및 두산백과([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직접 지불 단계적으로 인한 자금 흐름



자료: 영국회계검사원 (NAO), analysis of Future Farming and Countryside Programme policy statement and timeline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재인용

#### (4) 환경토지관리제도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ystem : ELMS/ELM)

EU 이탈 후의 농업 지원책은 ELMS 사업 주체가 된다. ‘공적 자금은 공공재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25년간의 환경 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토지 관리 제도이며, EU 이탈 후 지원책의 주요 정책인 ELMS 사업이 어떤 것이 될지는 영국의 농업, 환경 분야 종사자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ELMS 사업은 직접 지불의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EU 이탈에 따른 이행 기간과 신농업법 제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표 3> ELMS 사업 일정

2019~2024년	실증 (Test & Trial) 기간
2021~2024년	파일럿 사업 기간
2024~2028년	ELMS 사업의 완전 실시

자료;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

현재 진행되고 있는 Test & Trial은 ELMS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결과에 따라 지급과 토지관리 계획(Land Management Plan)을 어떻게 만들어 같은 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개별 요소에 대한 사례로부터 검증한다. 이 과정의 실시 주체는 영국을 대표하는 환경보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sup>35)</sup> 왕립 애조(愛鳥)협회(RSPB<sup>36)</sup>,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등이다.

2016년 EU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내추럴 잉글랜드(NE)는 요크셔 데일스 국립공원국(YDNPA<sup>37)</sup>)과 협력하여 노퍽<sup>38)</sup>/서퍽<sup>39)</sup>와 및 요크셔 데일스의 2개 지역에서 ‘결과(수입, 收入) 기반 농업환경 지불 계획(Results-Based Agri-environment Payment Scheme, RBAPS<sup>40)</sup>)’의 파일럿 사업을 실시하였다(2016~2018년).

2019년 10월 9일, 이 사업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본 제도에는 큰 가능성

35)국민이 자금을 모아 자연환경이나 사적(史跡) 따위를 사들여서 보존하는 제도. 국민 환경 기금이라고도 하는데 영국에서 1907년에 법제화되었다.(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36)RSPB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 등록된 자선 단체임. 1889년에 설립되었고, 영국 전역에 걸쳐 자연 보호 구역의 운영을 통한 대중 인식 캠페인, 청원, 그리고 더 넓은 환경을 통해 조류들의 보존과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일함. RSPB는 1,300명 이상의 직원과 18,000명의 자원 봉사자 그리고 백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에서 야생 동물 보호 자선 단체 중 가장 큰 규모임. RSPB는 많은 지역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200개의 자연 보호 구역을 유지하고 있음. 오늘날, RSPB는 보존과 환경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언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음. 영국에서 발견된 모든 새들의 공식적인 보존 상태를 결정하는 몇몇 기관 중 하나임. RSPB는 조류 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출처: RSPB 웹 사이트([www.rspb.org.uk](http://www.rspb.org.uk)) 및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Royal\\_Society\\_for\\_the\\_Protection\\_of\\_Birds](https://en.wikipedia.org/wiki/Royal_Society_for_the_Protection_of_Birds))

37)Yorkshire Dales National Park Agency. 1954년 국립공원이 설립된 후, 요크셔 데일즈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1997년 지방 정부의 틀 안에서 독립된 기관이 되었음. YDNP는 다른 지역의 지방 의회와 지방 의회가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역할은 의회에서 YDNP의 두 가지 법적 목적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됨. ●국립 공원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야생 동물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중에 의한 지역의 특별한 특성의 이해와 즐거움을 위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도 필요함. ●국립공원 내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함.(출처: YDNP 웹사이트, <https://www.yorkshiredales.org.uk/>)

38)영국 잉글랜드 동부에 있는 카운티. 노퍽은 18세기에 시작된 신농법(新農法)이 최초로 발달한 곳으로, 현재도 주요농업지역으로, 보리·사탕무·소·양·칠면조 등 농목업이 성하다. 공업은 전통적인 모직·견직 공업이 노리치·그레이트야머스에, 농업·기계 공업이 노리치·킹스틴 등지에서 성하다. 그 밖에 피혁·신발류·식품업이 각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레이트야머스는 북해 어장에 입한 주요 어항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두산백과([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39)영국 잉글랜드 동부의 주. 1974년 4월 1일, 동서퍽·서서퍽이 합병하여 성립. 주도는 입스위치(Ipswich).(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40)유럽 전역에 걸쳐 농업 환경 계획은 농부들이 농지의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금을 제공함. 결과 기반 계획은 농지의 생물 다양성 개선을 보상하는 지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실제로 위원회는 결과 기반 농업 환경 계획, 즉 농업에서의 생물 다양성 성취에 초점을 맞춘 계획에 대한 연구, 정보 및 실무 경험을 통합한 웹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 여기서는 기존 계획에 대한 검색 가능한 인벤토리,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된 다운로드 가능한 핸드 북, 전문 기사 및 비디오를 찾아 계획 설계, 구현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2014-15년 유럽 위원회는 유럽 의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스페인(Navarra), 영국(잉글랜드)등에서 농업 분야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수입 기반 지불 제도(RBPS)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설계 및 구현 방법에 대한 추가 노하우를 수집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음. 2019년 8월 기준 그러한 계획을 조장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 즉, 아일랜드 및 스페인 시범 사업, 영국의 시범 사업이 그 것임. 루마니아의 시범 사업도 마무리되었지만 최종 보고서는 2019년 11월로 예정돼 있음. 유럽 위원회는 2019년 10월 17일 브뤼셀에서 세 가지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출처: EU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nvironment/nature/rbaps/>)

이 있다고 하여 Defra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은 Test & Trial의 일환으로 2021년 3월까지 계속된다.

ELMS 사업의 지금까지 Test & Trial에 대해, 현재는 지방교부금<sup>41)</sup>(local payment rate)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모델로 삼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Defra는 아직 구체적인 실시 내용을 밝히지 않고, 현지 지불 비율 계산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 또한 결과에 근거한 지불(result based payment)은 직접 지불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야심적(ambitious)이라기보다는 급진적(radical)이라고 할 수 있다.

ELMS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농민과 지방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규정이 생긴다는 점에서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가 쉽게 이해할만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농가를 조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농가에 돈이 있다면 사무 작업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Test & Trial에서는 사무 작업의 간소화라는 관점도 평가된다. 미래에는 디지털 매핑(Digital Mapping<sup>42)</sup>) 도입 등 전자화를 통해 사무 처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5) 토양 대책

영국에서 토양은 물이나 공기에 비하여 지금까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의회에서 토양에 관한 보고서<sup>43)</sup>가 2016년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25년간의 환경계획에 있어서 2030년까지 지속적인 토양 관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과 연계되어 있다.

현시점에서 영국의 토양 관리 정책은 대부분 피트(peat<sup>44)</sup>) 보전 대책이다. 영국 피트의 대부분은 습지대인 펜(Fen<sup>45)</sup>) 등의 평지에 존재하며, 좋은 농지로 농업 생산에

4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매년 지원되는 보통교부금(10/11)과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1/11)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의 사용내역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뉜다. 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13.27%로 정해져 있다. ②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매일경제([www.mk.co.kr](http://www.mk.co.kr))

42)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형도를 작성하는 수단.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존의 지형도에서 핸드 디지털라이저나 래스터 벡터 변환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지형도의 데이터를 얻거나 토털 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항공사진에서는 해석 도화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지형도를 작성하는 것 따위를 의미한다.(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43)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2016) "Soil Health: First Report of Session 2016-2017"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envaud/180/180.pdf>)

44) 땅속에 묻힌 시간이 오래되지 아니하여 완전히 탄화하지 못한 석탄. 이끼나 버 따위의 식물이 습한 땅에 쌓이어 분해된 것으로, 광택이 없고 검은 갈색을 띠며 해면 모양이나 실 모양 또는 흙덩이 모양을 하고 있다. 발열량이 적으며, 비료나 연탄의 원료로 쓰인다.(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45) (특히 잉글랜드 동부의) 소택지.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고, 배수가 불량하거나 또는 지표 가까운 지하에 불투수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걸쳐 얕은 수심을 나타내며 물이 고여 있는 호소성

사용되고 있다. 또한 수질 보전이나 홍수 방지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30~60년 후에 이들 피트는 손실되고, 피트 손실에 따른 CO<sub>2</sub> 배출량의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토양 대책으로서 피트 토양의 이용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 시민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예용 피트 이용도 2020년까지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생산성이 높은 피트 지대에서는 농지 이용 및 농지 이용을 그만두는 중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향후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5년 이상의 초지<sup>46)</sup>는 오랫동안 초지로 인식되는 등 토지 이용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 2.2. EU 탈퇴 후 무역 정책

### (1) EU 탈퇴 후 무역 정책의 개요

영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행 기간 종료까지 EU를 비롯한 EU 역외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 된다. 이행 기간에 대해 영국과 EU 사이에 2020년 6월 30일까지 합의가 형성된다면, 1년 또는 2년의 연기가 가능하지만,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럽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정치 선언의 틀에 따라 영국과 협상을 진행하되,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0년 말까지 영국과 EU의 새로운 관계에 관한 모든 면에서 합의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한다며, 11개월의 이행 기간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협상단장(Head of Task Force for Rel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바루니에(Michel Barnier)는 2020년 협상에서 다음의 3개 항목에 집중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sup>47)</sup>.

- 영국과 EU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반 구축
- 영국과 EU 간의 매우 긴밀한 안보 체제 구축
- 영국과 EU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전제로 한 경제 관계 구축

---

의 지역을 말한다. 보통 식생이 밀생하여 부들, 줄, 갈대, 창포 등이나 대형 사초류 등의 정수식물이 나타난다. 그 주위에는 오리나무 등이 습지립을 이룬다. 하천 양안의 자연제방 배후에 나타나는 배후습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안에는 염생습지가 나타나는데, 석호가 매몰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형태를 잘 보여주며, 때로는 해안사구 사이의 스웨일 같은 곳에 염생습지가 발달하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46) 초지는 주로 초본식물로 덮인 토지로 산림·경지 등과 대응되는 용어이다. 초지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연적으로 초본식물이 우점(優點)하고 있는 초지를 야초지(野草地) 또는 자연초지라고 한다. 또 인간이 개량한 목초를 재배하여 목초가 우점하고 있는 초지를 목초지(牧草地) 또는 인공초지라고 부른다. 목초지는 다시 이용방법에 따라 방목지·채초지·겸용초지 등으로 나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47) EU위원회 프레스릴리스([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3))

한편 영국 정부는 EU 단일 시장 관세 동맹에서 이탈을 기대하고 있다. 또 EU 법의 적용을 폐지하여, 영국법을 적용해 나가지만, 당분간은 EU 법에 근거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2) 각 업계의 반응

### ① 소매업

#### 1) 업계 단체로서 우선 순위

EU 이탈 후 무역 정책에 관해 소매업계에서는 ① 원활한 이행과 ② 제로 관세의 실현이 최대의 초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소매업계 단체는 영국 정부에 대해 고차적인 합의(higher level alignment)로 향후 EU와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대두될 세부 사항(예: VAT,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SPS))을 조기에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 이탈 후 영국은 새로운 협정 문서에 관한 EU와의 교섭은 물론, 동시에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sup>48</sup>)’ 과의 협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CPTPP에 관해서는 농산물 기준의 배경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경계심이 높다. 때문에 업계 단체는 양국 간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농업 단체 및 식음료 산업은 미국과 협상에서 경쟁 상대가 될 우려 때문에 소매 업계보다 적대적인 경향이 있다.

협정에 합의한 후에는 제도를 실효적으로 실시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포인트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가 모여 2020년 1월에 이탈을 위한 협의를 열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2) EU와의 관계

영국 소매업계의 입장에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수입식품으로, EU와의 교역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EU와의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의 통상총국

---

48)기준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음.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되었음.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되었음. 이 경제협력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의 양자 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The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G Trade)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무역 담당위원인 필 호건(Phil Hogan<sup>49</sup>) 씨는 아일랜드 출신이며, 또한 전 농업 담당 위원이기 때문에 식품 무역에 관해 영국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EU와의 무역에 관해 국경에서 세관, 검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업계 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여러 제도의 정비는 아직 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참고로 2019년 11월에 발효된 EU-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 제품의 EU 시장의 시장접근 보증 등의 측면에서, 영국의 EU 이탈 후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 ② 식품·음료업계

### 1) 업계단체로서의 우선 순위

영국 정부가 중시하는 EU 이외의 무역 상대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식음료업계는 미국, 일본, 인도, 중국, 걸프 국가를 중요 국가로 보고 있다. 같은 영어권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는 일찍부터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와 같은 나라는 저렴한 쇠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영국에게 위협적이기도 하다.

현재 EU의 물류 요충지인 포크스톤 항(Folkestone)에는 세관 및 검역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국이 이탈 후 어떻게 물류를 검사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아시아, 남미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하역항인 펠릭스토우 항(Felixstowe)은 이미 세관 및 검역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절차에 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단체는 예상하고 있다.

### 2) EU와의 관계

EU와의 관계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EU와의 무역 관계를 현상 유지하고, 국제시장에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다. 영국의 식음료산업은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한편, 기준이 충족되면 수입도 확대시키고자 생각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명산품<sup>50</sup>을 보호하기 위해 EU의 지리적 표시(GI<sup>51</sup>)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49) 필 호건(Phil Hogan, 1960년 7월 4일 출생)은 아일랜드 파인 가엘 정치인으로, 2019년~2020년 유럽 통상담당 집행위원, 2014~2019년 유럽 농업농촌개발담당 집행위원을 지냈음. 앞서 2011~2014년 아일랜드 환경·공동체·지방정부 장관, 1994~95년 재무부 국무장관을 거쳐 1989~2014년 카를로-킬케니 선거구에서 티치타 달라(Teachta Dála, TD: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의원(MP)이나 의원(의원)과 같은 용어에 해당함.)를 지냈음.(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hil\\_Hogan](https://en.wikipedia.org/wiki/Phil_Hogan))

50) 어떤 지방이나 나라 따위의 이름난 산물.(출처: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 3. 영국 농업·식품 분야의 영향

#### 3.1. 이탈에 의해 우려되는 과제

##### (1) 규제 기준

EU 단일시장에서 이탈하여 검역,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 식품 표시, 동물 복지, 바이오 기술 등에 관한 규제 기준의 동등성 인증 등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고 있다. 또 EU 단일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EU 내(아일랜드 포함)에 구축된 공급망 및 푸드 체인에도 관세, 인증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 노동력 부족

현재 영국에서 EU 신규 회원국(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계절 노동자와 같은 미숙련 농업 종사자를 8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2018년 3월 현재). 따라서 EU 이탈하게 되면 농업에 관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sup>52)</sup>.

농업 단체에 따르면, 2019년 1월~8월에 걸쳐 이주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3,603개 농장의 포스트가 메꾸어지지 않았으며, 8월에만 17.6%의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였고, 10월까지의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과일과 채소부문은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일부 농장에서는 이들 노동력 확보를 못하여 농산물이 수확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3월 영국 정부는 농업 이주 노동자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非EU권 또는 그 외 지역에서 2,500명의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하지만, 농업단체는 2020년까지 7만 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프로젝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Defra는 영국이 EU과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EU 시민은 2019~2020년까지 취업을 위해 영국에 머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입국한 모든 EU, 유럽경제지역(EEA)과 스위스 국민에게 3년간의 잠

51)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TRIPS 제22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일컫음. 지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 생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됨. TRIPS는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규정 외에 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음.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무역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https://terms.naver.com/>)

52)2019年 6月 3日字 IEG Policy 참조

정적 체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농가는 2020년 말까지 EU국가에서 농업 노동자 모집이 가능해졌다<sup>53)</sup>.

## 3.2. 각 업계의 반응

### (1) 소매 업계

#### 1) 업계에 미치는 영향

영국의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예: 겨울철 토마토는 70~90%를 EU에서 수입). 미국 등 EU의 역외에서 조달도 가능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 관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농산물 수송시간 증가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매업계에 있어서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항구는 프랑스 카레와 연결되어 있는 포크스톤(Folkestone) 항이다. 영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10%가 이 항구로 수입되고 있다. EU으로부터 온 농산물은 야간에 EU 측 생산지를 출발하여 검역을 받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영국시장에서 판매된다. 이탈 후 만약 국경에서 검역을 실시하면 물류에 차질이 생겨 농산물·식품 품질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물리적인 검역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업계 단체들은 생각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영국 경제에 중요한 분야이다. 영국은 식품 수출도 많지만, 수입도 많아 모든 것을 자급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부문(식품 포함)의 제품에 대하여 물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별 협정(Sectoral arrangement)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2) 업계로서의 대응

영국의 소매업계는 2019년 11월 정부에 마케팅, 관세, VAT, 검역 등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국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 로드맵도 작성하고 있다. 업계 단체의 회원사는 비축·서플라인 체인(supply-chain)을 재검토하고, 생산의 효율화를 통해 영국의 EU 이탈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 (2) 식품·음료 산업

#### 1) 업계에 미치는 영향

<sup>53)</sup>2019年 10月 10日字 IEG Policy 참조

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준의 설정에 대해 현재 영국 규칙의 90%는 EU의 규정에서 유래한다. EU에 45년 이상 가입하여 자국의 규칙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즉시 영국 고유의 것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때문에 EU 규정을 그대로 영국의 규칙에 준용하는 것을 업계 단체는 검토하고 있다. 또한 EU 규칙을 준용함으로써 EU과의 무역 관계가 원활하게 지속되는 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환경요건을 EU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싶어 하며, 식품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 안전기준에 관해 영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EU 기준에서 영국 기준으로 바뀌어나갈 생각이긴 하지만, EU 기준과의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EU와의 무역은 어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EU 회원국의 소비자로부터 경원시되는 GMO는 대부분의 영국 생산자·가공업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품질표시 라벨은 영국 자체의 것이 권장된다. 예를 들면, 유기제품은 지금까지 EU 라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국 라벨을 사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가공업체는 제품의 패키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에선 추가 생산 비용이 발생한다.

영국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준이 EU 기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EU으로부터의 이탈로 말미암아 기준이 더 다층화·복잡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만족할만한 조정을 실시하기는 곤란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조건(예: 평사 사육 닭고기, 계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WTO 규정에 의한 동물복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관세 상승분에 대해 업계단체는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업계로서의 대응

영국의 식품·음료 산업은 2017년에 식품·음료 산업에 미치는 수출입 영향에 대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탈 후 어떤 규정이 생겨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식품·음료업계는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정부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 대화에서는 누구와 대화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영국 정부도 Defra와 영국 국제통상부(DIT) 사이에는 환경보호와 무역촉진이라는 다른 개념 하에서 대립이 보인다.

업계단체의 회원 기업은 영국의 EU 탈퇴에 대비하여 공급망 검토(수출입처, 원료 조달처 등)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EU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제조라인의 일부를 EU에 옮기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 EU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따른 과제를 리스트 업하고 있으며, 유기농 제품, 쇠고기(특히 다진 고기) 등으로 문제가 인식되고 있다.

영국 국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인 제3국 기업·관계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로테르담에서 출발하여 파리 경유, 영국으로 수송할 때 파리 측에서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낙농 업계

#### ① EU

영국의 낙농부문은 80%가 자급이며, 체다 치즈(200유로/톤)를 비롯한 중요한 치즈 수출국이다. 향후 무역협정의 동향에 따라 수출 다변화 등으로 대응을 재촉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낙농부문에서 영국의 EU 탈퇴 영향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유럽 유제품 수출입·판매자 연합(Eucolait) 등의 광역적인 유럽의 업계단체에 영국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EU 측은 회원들과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가공업체들도 영국의 EU 탈퇴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영국, 아일랜드, EU 간 무역은 밀접한 유통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화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영국

영국의 낙농산업에서 2019년 11월 시점에서 EU 탈퇴에 관한 특별한 영향은 없다. 2020년 1월 31일 이탈까지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낙농부문은 신선한 원유 수송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업계는 양국 관계를 증시하고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고 있다.

낙농업계에서 양국 간 협의를 할 때 넓게는 무역 관계를 포함한 플랫폼이 되는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의 낙농업계는 EU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영국은 EU로 1,400만~1,500만 리터의 우유를 수출하고 있다. 관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합의를 성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준비에 있어서는 분유도 중요하다. 최근 영국의 분유를 호주에서 가공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기농 우유에 대한 중요한 거래 상대인 미국<sup>54)</sup>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유기농에 관해서서는 미국의 기준이 영국보다 까다롭다. 한편,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영국이 더 엄격하다(또한 EU 표준보다 영국이 더 엄격하다). 미국 농무부(USDA)에 대해서는 영국과 대등한 인증을 원한다.

54)현지 청취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의 10%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최대시장이다.

EU에 대해서는 별도로 27개국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으나, 유기농업 기준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의 유기농업 기준은 원래 EU의 기준이다. 현재 이탈 후 합의된 새로운 유기농업 기준은 없다. 영국은 EU 탈퇴에 의해 EU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Defra는 새로운 품질 기준 정비에 착수하고 있다. Defra는 영국 농산물 인증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동유럽 국가에서 노동자가 부족한 것은 낙농에서도 과제이다. 한편, 가축 질병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국경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국은 과거에 가축안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광우병 등),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이력추적제)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다.

## 참고문헌

- JETRO 비즈니스短信「欧州理事会, 英国との将来関係をめぐる交渉準備の着手を欧州委に要請」(<https://www.jetro.go.jp/biznews/2019/12/5f54d4f67cc74e9b.html>)
- JETRO 비즈니스短信 2020년 1월 24日字  
(<https://www.jetro.go.jp/biznews/2020/01/5a709665788e3d98.html>)
-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
- 和泉真理(2019), 「ブレクジットと英国農政, pp.56-58」, (JCA 研究ブックレット No.25)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Farming for the future: Policy and progress update February 202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8041/future-farming-policyupdate1.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8041/future-farming-policyupdate1.pdf))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Policy discussion document” ([https://consult.defra.gov.uk/elm/elmpolicyconsultation/supporting\\_documents/elmdiscussiondocument20200225a%20002.pdf](https://consult.defra.gov.uk/elm/elmpolicyconsultation/supporting_documents/elmdiscussiondocument20200225a%20002.pdf))
-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United Kingdom’s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on 31 January 20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10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104))
- European Council, “European Council (Art. 50) meeting (13 December 2019)- Conclus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1796/13-euco-art50-conclusions-en.pdf>)
- European Parliament, News, “Brexit deal approv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00128IPR71204/brexit-deal-approved-by-the-european-parliament>)
- House of Commons Library, “Agriculture Bill 2019-2020, Briefing Paper”, 10 February 2020(<file:///C:/Users/1730959/Downloads/CBP-8702.pdf>)
-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2016) “Soil Health: First Report of Session 2016-2017”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envaud/180/180.pdf>)
- 영국회계감사원 (NAO), analysis of Future Farming and Countryside Programme policy statement and timeline
- 英国政府ウェブサイト(웹사이트), 2020년 1월 30日字(<https://www.gov.uk/government/news/environment-bill-sets-out-vision-for-agreener-future>)
- EU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nvironment/nature/rbaps/>)
- EU위원회 프레스릴리스([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13))

네이버 블로그 nhgtnow, <https://blog.naver.com/malk/221371880641>)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무역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사전, 이종수, <https://terms.naver.com/>).  
두산백과([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